

## 1992년 2월 3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2년 2월 3일(월) 오전 9시 개의

○ 발언자:

- 야마하나 사다오(山花貞夫) 의원(정치가, 변호사, 중의원 의원, 일본사회당 서기장·위원장, 국무대신(정치개혁 담당))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정부위원(외교관, 외무성 아시아국장,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장, 주 인도 대사, 주 중국 대사)
-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정부위원(외무성 조약국장, 외무사무차관, 주미대사,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등)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국무대신(외무관료, 정치가, 자유민주당 소속. 방위청 장관, 내각관방장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간사장, 후쿠오카 시장, 일본 중국우호협회 회장·명예회장)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261X00219920203&spkNum=38&current=35>

○ 해제(개요 및 특징)

야마하나 의원은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정식으로 요구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청구권 협정의 의제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급적 정치적 결단으로 **위안부**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함. 이에 대해 야나이 정부위원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일괄 타결되었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함. 가토 관방장관 역시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최종 해결되었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을 반복하면서 재판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함.

○ 주요 내용 번역

▷ **야마하나 위원**“(전략) 일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단적으로 말해서, 방한의 성과에 대해 시정방침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총리께 먼저 여쭙보고자 합니다.”

(중략)

▷ **야마하나 위원**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전쟁 전의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명하시고, 그 후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과거 침략전쟁의 대상이 되었던 각국의 여러분에게 반성과 유감

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상에 남는 것은 두 가지 의제가 아닐까요? 하나는 언론이 일제히 전한 바 있는,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한 점과 PKO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응당한 조치를 요구받은 점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장래에 걸쳐 신뢰 관계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원점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얻은 하나의 큰 선물이 아닐까요.” (중략)

▷ **야마하나 위원** “(전략) 일한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서 묻고 싶습니다. 한국정부는 그 가운데 하나의 의제로 남아 있는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월 21일 한국 측에서도 각 성청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어, 일본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 해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국 내 시민운동이 유엔에 제기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줄곧 문제로 삼지 않고, 도망으로만 일관해 왔지요. 실태, 진상규명, 조사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시민운동이나 학자들이 간신히 발견해낸 자료가 세상에 드러나,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실태가 아닙니까. (중략) 자, 그럼 문제를 좁혀서, **중군위안부**의 보상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 **다니노 정부위원** “의원님도 안내하신 대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국내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귀추를 지켜본다는 것 입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종류의 문제도 포함하여 법적으로는 1965년의 일한 국교 정상화 당시 논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략)

▷ **야마하나 위원** “청구권 보상은 아닙니까만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라고 들었습니다.

청구권이란 것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 내용에 예컨대 **위안부** 여러분의 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야나이 정부위원** “당시 일한 국교 정상화의 매우 길고 복잡하고 또 곤란한 교섭 속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청구가 한국 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략)

이 교섭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청구에 관해서는, 예컨대 대일(対日) 8개 항목에 관한 청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구체적으로 그런 청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양한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약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 **야마하나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당시 8개 항목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또 이야기하신 대로 **위안부**의 보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부 해결됐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혀 상의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결됐다는 논리에 관해 설명해주시시오. 지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 **야나이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대일 청구인 항목이란 것이 있어서, 그중에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청구한 사항 가운데 이른바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당시 한국 측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통치시대의 여러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기에는 여러 곤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구권 처리 문제는, 일한 두 나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이뤄지지만, 그런 청구의 근거나 자료라는 것이 반드시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섭상 어느 일정 시기 타결을 도모하게 된 단계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도 포함하여 청구권 문제를 모두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처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되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읽어드렸듯이 일한 조약상에서는 그렇게 당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포함하여 모든 청구권 문제가 양국 간에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일한 양국 정부 간 합의 하에 그런 처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야마하나 위원**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을 전체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그러한 이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자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문제에 대해, 소송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만, 긴 재판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팬찮은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5년, 10년 오래 계속된다면, 그동안 지켜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이 점에 대해, 관방장관이 이 문제를 줄곧 담당해 오기도 했으므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새로운 논의도 나온듯하니 이에 대해 정리하여 듣고 싶습니다.”

▷ **가토 국무대신** “제가 기자회견 등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은, 이른바 한국인 **위안**

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조약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보상 문제는 처리가 끝났다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앞서 조약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소권(訴權)을 빼앗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 **위안부** 문제는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상처라는 문제도 있으므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로서도 신중히 또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